

<보도자료>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 시민들의 힘으로
꽃피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

□ 때: 2011년 5월 20일 (월) 오전 11시

□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권교육센터 들)

1. 여는 말 및 주민발의 서명운동 경과보고

- 사회자

2.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내용 및 주민발의 성사 의의 소개

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이모저모

4.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대 시민 감사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6.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식

[자료 1]

학생인권의 봄날을 열기까지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운동 취지와 경과보고

■ 주민발의운동의 취지

- 경기도 조례 제정의 경험에서 현장 교사와 학생 주체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과정에 대한 반성. 현장의 준비됨과 교사들의 적극적 협력 없이 조례는 만들어지더라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
-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민발의 서명운동 채택.
- 학생인권에 대한 부풀려진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성. 학생인권이 '무서운 학생'의 얼굴이 아니라, '존중과 소통에 기초한 교육'을 꿈꾸는 시민들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계획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학생인권 현실과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인.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주요 경과

- ▷ 2009년 7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구성.
- ▷ 2010년 2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최종안 발표
- ▷ 2010년 5월, 교육감 후보들과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 정책협약식' 개최
- ▷ 2010년 7월 7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출범
- ▷ 2010년 7월 17일, 서울시교육청 오장풍 교사 체벌 사건을 계기로 체벌 전면 금지 계획 발표
- ▷ 2010년 9월 17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
- ▷ 2010년 9월 27일,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교과부의 체벌 합법화, 학교규정을 통한 학생인권 제한 등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상위법 개정 시도 움직임.
- ▷ 2010년 9월말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00인위원회 구성
- ▷ 2010년 10월 6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달하고 조례를 반영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권고.
- ▷ 2010년 10월 6일 : 서울학생인권조례 시민제안마당 개최
- ▷ 2010년 10월 18일, 참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수도권 지역 학생 1885명, 교사 1478명, 학부모 959명 대상 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학생 88.6%, 교사들 88.7%, 학부모는 87.6%가 필요하다고 답해.

- ▷ 2010년 10월 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공청회 개최. 이후 주민발의안 확정
- ▷ **2010년 10월 2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시작**
- ▷ 2010년 11월 2일, 81돌 학생의날 맞이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토론회 개최
- ▷ 2010년 11월~12월 : 11월 1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실시 이후, 몇몇 언론들의 '위험한 학생론', '학생 vs 교사 대립' 보도 급증. 서명운동 주춤.
- ▷ **2011년 1월 17일, 교과부 '학교문화선진화방안' 발표. 1월말 학교장의 학생 권리 자의적 제한, 간접체벌 허용 등 반인권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입법 예고**
- ▷ 2011년 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120여개교가 학생인권조례 취지와 상반되는 학교생활규정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추진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에 버티기로 일관.
- ▷ 2011년 1월 26일,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공동 주최). 이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 **2011년 2월 8일, 영하의 추위를 뚫고 매일 주민발의 서명전 들입. 주말 집중서명전, 행사장 서명도 이어져**
- ▷ 2011년 2월 15일, <교과부 인권침해 정책, 청소년 긴급 성토크대화> 개최
- ▷ 2011년 2월 16일, <학생인권조례의 시대, 교사가 말하다> 집담회 개최. '학생인권 vs. 교사 대립 구도'의 허구성을 초중고 교사들이 직접 나서 질타
- ▷ 2011년 3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결정. 간접체벌을 허용한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에 대한 의견 발표.
- ▷ 2011년 3월 6일·7일, <경향신문> '아직도 먼 학생인권' 기획 보도. 서울본부 기획 참여.
- ▷ **2011년 3월 8일 : 서울 중암중 체벌사건 규탄 기자간담회 개최**
- ▷ **2011년 3월 14일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안 국무회의 통과.** 애초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이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으로 삭제. 그러나 간접체벌 허용의 불씨 남겨.
- ▷ 2011년 3월 14일~31일, <학생인권 시민 연속특강> 5회 연속 개최(경향신문·오마이뉴스·한겨레 공동 후원). 박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범희 용인 흥덕고(혁신학교) 교장,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백창우 시인/작곡가 초청 강연. 매회 시민 1백~3백여 명 참여로 학생인권에 관한 높은 공감대 형성
- ▷ **2011년 4월 7일, <학생인권설문조사(언어폭력, 차별) 결과 및 학생인권 침해 제보 사례> 발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 꼴로 1주일에 1~2회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욕설, 인격 비하 등)을 경험. 16.6%가 차별을 자주 경험한다고 답하고, 25.7%는 가끔 차별을 당한다고 답해.
- ▷ **2011년 4월 11일, <4월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우자!>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 개최.**
- ▷ 2011년 4월 1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 학생인권으로 이어가자!> 청계광장에서 국립 4.19묘지까지 주민발의 동참을 호소하는 도보행진 진행.
- ▷ **2011년 5월 1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 마감**(애초 4월 26일 마감이었으나 서울 중구, 강남구 재보궐 선거로 인해 14일 연장). 주민발의 성사 기준인 8만 1885명을 뛰어넘는 **8만 5281명**의

서명 취합.

▷ 2011년 5월 11일~19일, 서명지(청구인 명부) 동별 분류 작업

▷ 2011년 5월 20일 10시 30분,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의 찬란한 봄을 꽃피웠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 및 대 시민 보고 기자회견 개최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겨울에서 봄으로!

▷ 2010년 봄의 시작 : 7월 7일 서울본부 출범 이후 교사, 청소년, 시민사회 등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작성.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참고로 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안을 작성. 10월 27일부터 주민발의 운동 시작

▷ 2010년 먼저 찾아온 겨울 : 초기 3개월간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대응과 영하의 추위, 주민발의 운동의 생소함 등 여러 요인들이 얽히면서 서명 운동이 제대로 불붙지 못함. 2011년 1월말까지 서명이 기대만큼 취합되지 못함.

▷ 2011년 겨울_봄 : 1월말 주민발의운동 방식을 계속할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내부 토론을 전개. 주민발의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애초 취지대로 주민발의 운동을 지속하기로 재결의. 2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매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거리서명전 진행. 각종 행사장과 시민들의 삶터로 찾아가는 서명 활동, 학생인권 연속 특강,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 등을 통한 홍보와 동참 호소 활동 등을 열정적으로 전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일반 시민은 물론 종교계, 노동계, 언론출판계, 진보정당계 등 각계 동참의 불이 붙기 시작.

▷ 2011년 이른 봄 : 주민발의 종료 시점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서울본부 소속단체들이 열정적으로 서명활동을 전개하기 시작. 4월 4일자 <한겨레>에 실린 홍세화 청구인 대표의 칼럼, 청소년들의 절절한 호소를 다룬 기사 게재 등을 계기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 증폭. 서명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 시민들의 거리서명 참여 열도가 높아지는 한편, 우편 서명도 속속 도착.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 서명보다 발품을 팔아 직접 만난 시민들, 학생인권조례의 뜻에 공감한 낯모를 시민들의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 그러나 4월 26일 애초 주민발의의 성사 시점에도 8만2천여 명을 채 모으지 못함. 4.27 중구와 강남구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로 인해 중구와 강남 일부에 한해 서명운동이 연장되면서 '10회말 역전만루홈런'의 기회가 찾아옴.

▷ 2011년 늦봄 : 노동절, 어린이날, 시청 앞 축제, 부처님오신날 한마당축제 등 중구에서 여러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서명 참여율이 가파르게 상승. 그 사이에도 속속 우편 서명지들이 도착. 서명 마감일에 이르자 애초 목표 인원보다 3천여 명이 많은 8만 5천여 명으로 집계. 역전만루홈런에 성공.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이후 절차

* 공표 (5일 이내)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 심사, 결정 (14일 이내)

* (유효 서명인이 부족할 경우) 보정(5일 이내)

* 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주민발의 조례안 제출 (60일 이내)

* 서울시의회 심의 및 의결

■ 학생인권조례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인권의 역사

▷ 80년대 말 교육민주화운동 과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교육민주화와 더불어 학생인권 보장을 함께 요구. 청소년인권운동의 싹이 틔던 시기.

▷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1년 대한민국 정부 가입**. 1996년 유엔아동권리 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1차 협약 이행 권고 발표.

▷ 1995년 최우주 학생(춘천고 1학년)이 '강제 보충·야자는 학생의 인간다움, 방과 후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중고등학생복지회>라는 **최초의 청소년인권 단체가 결성**. PC통신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시도**. 당시 교실붕괴 담론이 기하급수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기상조를 이유로 학생인권선언문 작성이 중단됨.

▷ 2000년 이른바 '**노컷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 온·오프라인 청소년모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대체를 중심으로 두발자유 서명운동이 전개. 청소년/비청소년들의 폭발적 호응을 얻으면서 짧은 기간 16만여 명의 서명이 모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학생인권에 관한 진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차 권고에 이어 2차 권고 발표**. 1,2차 권고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체벌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학교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많다 △학생회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학교 밖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교칙을 통해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음. 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여러 언론을 통해 사회에 전해지면서 유관단체와 교육계, 시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전환 계기를 마련.

▷ **2005년 '두발자유와 인권을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이 개최되는 등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 번 들끓기 시작**. 학내 종교 자유, 선거권 인하, 정보인권 보장,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등 청소년 인권 운동의 의제 역시 확산되기 시작.

▷ **2006년 17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되면서 법률 차원에서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계의 운동이 전개**. 각계 단체들이 모인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의 법 제정 운동,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전국행진 등을 통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요구. 2007년 말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신설되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을 의심받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2009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중앙 법률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교육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본

격화하기 시작. 초중등교육법이 담아내지 못한 구체적인 학생인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권리회복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가시화. 2010년 9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 학생인권조례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

▷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진보교육감이 6개 지역에서 당선.

▷ **2011년 5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운동 성사.** 교육청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 강원, 광주 등을 제외하고, 경남, 충북 등지에서도 주민발의 운동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 밝혀 학생인권이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게 됨.

[자료 2]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과 주민발의 운동 성사 의미

■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주요내용

○ 주민발의안의 구성(총 5장, 50개조)

장	장의 제목	주요 내용
제 1 장	총칙	조례의 목적, 개념 정의, 학생인권보장 일반 원칙, 교육관계자의 책무, 교육관계자의 교육환경개선 노력의무
제 2 장	학생의 인권	○ 총 10개의 절과 23개 하위 권리조항으로 구성 ○ 차별받지 않을 권리(제1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제2절), 교육에 관한 권리(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제4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제5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제6절), 복지에 관한 권리(제7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제8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제9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제10절)
제 3 장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의날(제29조), 인권교육과 홍보(제30조~제33조), 정기적 실태조사에 기초한 인권실천계획 수립(제34조~35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36조~37조), 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제38조), 시민활동 지원(제39조) 등
제 4 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제40조~44조),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제45조 ~47조) 등
제 5 장	보칙	학교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제48조) 등
부칙		조례 시행일(제1조), 경과조치(제2조)

▪ **학교에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지도록**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의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합니다. 학생은 몸과 인격을 무너트리는 체벌과 집단 괴롭힘 등의 폭력과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평화적인 학교문화로 바꿀 것입니다.
- 차별받지 않은 권리와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이 가난하다는 이유 등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차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차별 없이 모두가 즐거운 학교를 만듭니다. 특히 장애, 다문화 등 소수학생이 보다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턱은 더욱더 낮춰질 것입니다.

▪ **학생들의 개성이 꽃을 피우도록**

-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들은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억압적인 학교문화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함.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 규제, 용의복장 규제 등의 지금의 구시대적인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생 하나하나가 다양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임.

▪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건강이 보장되도록**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교에서 진행되는 0교시, 강제보충·야간학습은 학생의 아침밥과 잠을 빼앗아 학생들의 건강을 해쳤고, 무엇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습권을 빼앗았음. 학생인권조례는 0교시를 없애고 보충학습과 야간학습을 학생의 선택을 보장함. 즉, 학생의 건강을 보장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만들 수 있음.

▪ **대화과 소통의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도록**

-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들이 학교규정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교의 주인은 교장선생님만이 아님. 학생 역시 학교의 주인임. 학생인권조례는 일방적인 학교운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이 진행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도록 할 것임. 특히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임.

▪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보장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

-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실천계획 작성,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학생인권침해의 당사자이자 방관자였던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달라짐.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상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인권신장을 위한 계획이 마련·집행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음.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이 생겨 학생인권에 전문적인 인사가 학생인권문제를 조사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록 권한이 부여됨. 학생인권조례로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 성사의 의미

- 유치원과 학교 안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및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주민발의 서명참여라는 직접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연대와 지지의 의지를 확인한 결과임.
-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는 2004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 2009년 서울광장조례에 이어 서울지역에서 세 번째로 성사된 주민발의 사례임. 무엇보다 이전 주민발의안이 발의 조건을 충족하고 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다수당의 반대 속에 통과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시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음. 바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지역에서 주민발의로 제정된 최초의 조례가 될 수 있는 것임.
-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의 지지 속에 주민발의로 성사됨으로써 경기도에서 불어온 학생인권의 시대가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시대적 대세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나아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발표한 경남 및 충북 등 타 지역 역시 학생인권보장의 흐름이 힘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며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봄.

[자료 3]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이모저모 - 감동의 순간들 -

○ 어느 당당한 시민 분의 한 마디 “아무데나 아무나 다 빨갱이래요?”

은평에서 거리서명을 받던 중의 일입니다. 어느 한 할아버지께서 “이거 전교조에서 하는 거지? 수업은 안 하고 이런 거나 받으러 다니고... 이 빨갱이들. (서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거 서명하면 다 빨갱이 되는 거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자리엔 대학생과 인권활동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전교조 교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판대에서 서명을 하고 있던 어느 중년 여성 분의 말. “학교에서 맞은 사람은 그 상처가 평생을 가요. 어디서 아무데나 아무나 다 빨갱이래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혀를 찡찡 찹 뿐이셨죠. 당당한 시민 분의 한 마디였습니다.

○ “경기도 사람이라 미안해서”

4월. 꽃이 활짝 핀 봄이었지만, 그래도 거의 하루 8시간씩 밖에서 거리서명 받는 사람들에게 봄은 아직 추웠습니다. 그 날은 서울대학교 안에서 서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 한 분이 학생인권조례 설명을 듣더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서명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주소가 경기도시네요. 서울 지역의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만 할 수 있고, 경기도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 아쉬워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그 분이 “경기도 사람이라서 미안하네요.”라면서 음료수를 한 아람 사들고 와주셨습니다. 경기도 사람인 게 무슨 잘못된 것도 아닌데... ^^;

그밖에도 많은 경기도민, 인천시민 등 서울시민 아닌 분들이 서명을 하려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서명은 못하시고 마음만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한 경기도의 고등학생 분은 “학생인권조례 덕분에 학교 다니기 좋아졌어요!”라면서 서울에서도 힘내라고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음료수 몇 캔을 사주고 가셨습니다. 비록 서명은 서울시민 분들의 것만 있지만,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는 그렇게 마음을 보태주신 서울시민 아닌 분들의 힘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아이들, 청소년들이 시켜서 하는 서명

여의도공원에서 서명을 받고 있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한 분이 오셔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좋아하시면서 이게 꼭 되어야 한다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서명을 받고 나서 청소년 서명도 모으고

있지만 만19세 이상 어른들의 서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더니, 어디론가 달려가시더라구요. 잠시 후, “이리 와서 이거 좀 꼭 해줘요!” 이러면서 같이 공원에 온 어머니 손을 잡아끌고 오셨습니다. 영문도 잘 모르고 끌려오신 어머니께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서명을 받으면서 한 생각.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 손을 잡아끌고 하라고 시키는 서명이 학생인권조례 말고 또 있을까요? 여의도공원에서 말고도 거리에서 만난 많은 청소년 분들이 자기 가족들, 부모님들에게 꼭 서명하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What is this? physical punishment?"

명동 등에서 서명을 받다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십니다. 어느 한 외국인 분이 오셔서 저희 사진전과 선전물들을 보시더니 "What is this? Are you against physical punishment?"(이게 뭐가요? 당신들은 체벌에 반대하는 건가요?)라고 물으시고 뭔가 굉장히 빠른 영어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에, 대충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하면서도 대답을 어찌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사람들;; 대략적으로 체벌이나 차별, 두발복장규제 등에 반대하는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더니(물론 실재론 거의 단어 몇 개를 나열한 설명이었지만...) "OK. I think so."(좋아요. 나도 동의해요.)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힘내라고 하고서 가시더군요. 영어가 워낙 빠르셔서 차마 겁나서 서명해달라고 잡지는 못하고... 하지만 다른 외국인 분들도 많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청계광장에서 한 한국어 잘 하는 외국인 분은 서명을 하시면서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하루에 8시간 이하로 공부 시간을 줄이게 시위 같은 거 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하면 자기도 가겠다면서. ^^

○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4월 말 즈음 사무실에 앉아서 서명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으면 많은 시민 분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오십니다.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우편으로 보내기도 귀찮고 돈도 들고 해서 직접 서명을 하러 오셨다는 분들입니다. 한 번은 한 대학생 분이 학교는 충청도에서 다니고 있지만 집이 서울이라고 서울에 오신 김에 서명을 하러 들렀다고 찾아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한겨레에 홍세화 친구인 대표님의 칼럼이 나간 4월 초에는 하루에도 10분 20분이 멀다 하고 많은 시민 분들이 걱정과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리고 서명하는 방법을 물어보러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4월 말 즈음에 서명이 아무래도 몇백, 몇천장 부족할 것 같다는 걱정에 잠을 못 이룰 때에는 시민 분들의 자발적인 우편 서명만 하루에 400장 500장씩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학생인권이 꽃피는 더 좋은 교육을 바라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입니다.

○ “와줘서 고맙다”

서명 마감일을 며칠 안 남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산에서 거리 서명을 받고 있는데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지나가시다가 보고는 걸음을 빨리 하며 서명 가판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용 같은 걸 묻지도 않고 서명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신문에서 보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아직 못했어. (서명지에 홈페이지 주소를 가리키면서) 그

래 이거 sturight. 이 홈페이지까지 들어갔었다가. 여기 서명 받으러 와줘서 고마워요. 깜빡 못할 뻔했네.” 그 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학생인권조례 꼭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서명 받는 걸 잘 몰라서, 아니면 서명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아직 못하셨겠죠? 8만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서울시민 분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해주고 계실 겁니다.

[자료 4]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메시지

- 서울본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많은 시민들이 보내준 지지 메시지 중 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함.

■ 시민들이 보내준 우편서명에 담긴 지지 메모

- '전 서울 사람이 아니라 서명을 못해서 직장동료들한테 받아서 대신 보냅니다. 늦지 않게 도착해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송혁 씨)
- '홍세화 칼럼을 읽고 보냅니다. 홍세화 선생님과 학생조례제정운동에 나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허경희 씨)
- '늘 애쓰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우진 씨)
- '안녕하세요. ○○○○○학교 학생입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에 관심이 많아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위해서 학교 내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50장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주 씨)
- '힘 보탭니다!!' (박혁 씨)
-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힘내세요~!!' (○○○ 씨)
- '여기부터는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지지와 연대의 의미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나눔문화 유유)
- '(교육공동체) 나다의 메일을 보고 서명 받아 보냅니다. 고생해주셔서 고맙고 죄송합니다. 많은 힘은 아니지만 제대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 씨)
- '힘 내시고 수고하세요. 아자아자!!' (○○○ 씨)
- '홍세화 선생님 한겨레 칼럼보고 동참합니다!' (○○○ 씨)
- '학생인권에 애쓰시는 분들, 힘 내십시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4344년 4월 6일' (박용욱 씨)
- '몇 장 안됩니다. 꼭 10만이 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세요.' (○○○ 씨)
- '1.기성세력에게 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2. 학생의 인권은 종교의 자유와 폭력에서 해방될 때 가능해집니다. 3. 기성세대가 만든 학생의 일부 일탈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전부 넘기지 마세요.' (안덕상 씨)
- '늦었지만 몇부 더 보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하세요! 꼭 성공할거예요. 파이팅!' (이정주 씨)

■ 트위터를 통해 보내준 시민들의 지지 메시지

-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 한분한분의 지지가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학생들은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동생이며 언니이며 오빠이며 아들과 딸들입니다' (@baxtercielo)
- '비록 서울시민이 아니지만 멀리서 응원해 봅니다. 조금 더 상식있는 세상을 바라며... 꼭 발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Jack_Raspberry)
- '어린이가 어디서 폭력을 배웠을까?가정폭력,교사체벌 등 약한 자는 폭력으로,그것도 사적인 감정과 구분되지 않는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배운 것.내가 기분 나쁠 때는 약한 자를 때려도 된다는 거.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dangsaja)
- '어제 밤 꿈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서명지 1억장 받았다고 하길래 기뻐하는 꿈 꿔다... 얼마 안남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서명해요!' (@burstrides)
- '통조림처럼 같은 라벨, 같은 크기로 주어진것만 아는 우리학생들..왜 자기자식들을 그리 키웁니까! 생각없이 주어진 움직임만 하는 인형으로 우리아이가 자라기싫으시다면 학생인권조례 서명!!' (@saint_sj_66)
- '학생인권조례. 차별과 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꿈인 아이들. 21세기 교육현장에 아직도 차별과 폭력이 있다는 것에 한번 놀라고, 아이들의 자유와 인권은 탈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고... (@myh0121)
- '학생인권조례 서명 받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하루 종일 끈대들의 욕설에 지치고, 몸이 축나 병원에 실려가고 있단다. 5일 남았고, 목표치에 딱 1만 명 남았다. 걸핏하면 젊은 것들이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는 분들, 청소년들 울리지 말고 서명들 하시라.' (@leesongheeil)
- '나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말만 많이 했지, 내가 아는 지인, 단골 카페 주인과 그 손님 몇 명 받고, 이게 쉽지 않음을 깨닫고, 이만큼 했으니까 하고 손을 놓았다. 5일 남았고, 1만 명 남았다. 몇 장 더 받자.' (@urbantofu)
- '"매맞은 아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그걸 지켜봐야 했던 다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갈수록 선명해진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아직 서명이 모자라답니다.' (@dwbh4543)
- '한 외국인 유학생의 작문 오류: "어린은 잘못을 했을 때 때리는 게 효과가 있다" 여기서 뭘 어떻게 오류를 수정하는 게 옳을까요? 질문에서 변화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dirty_xijin)
- '학생인권조례발의 성공여부는 곧 이 사회 진보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의 "유권자"들을향해외치는만큼이나 "무권자"들의 권리찾기에 힘을보태려는노력은 중요합니다' (@Kong918)
-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8만명 발의를 못 채워 실패한다면... 20년 뒤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은 지금과 비슷하겠지요. 제가 트윗에 쓰는 글은 아이들을 믿고 존중하자는 것. 동의하시면 (우편용 서명용지) 인쇄후 써서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suhcs)
- '최근 잘한 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청구서에 서명해서 우편으로 보냈다. 잘 됐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으로서나마 성원을 보냅니다.' (@branNU_Jay)
- '저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위해 뛰어다닌 모든 청소년 활동가 분들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은 단군 이래 인정받지 못한 청소년 인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분의 후배들은 그 열매를 딸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parks9111)
- '학생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보장되는 시대가 열리는군요!' (@jb_1000)

- '기쁜소식(1/2) 학생인권조례서명자가 목표치를 어렵게 채워서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되었다네요. 선거 투표때에는 내표가 사표가 될까봐 헛헛했었지만, 이번에는 생(生)표가 되어 더 더욱 기쁘군요 ㅎㅎ (@SunnyNah)

- '학생인권조례 됐다..... 갑자기 너무 화가난다. 학생인권. 너무 당연한거아닌가? 왜 그걸 조례까지 만 들어서 지키자고 주장해야하는거고, 그게 통과안될까봐 맘줄여야 했던걸까. 너무 당연한건데 왜 그럴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왜. 싫다.' (@seminn222)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서울시민이 더는 아니더라는..... 이걸 차별이야! 아슬아슬하다 싶어 가슴 조이더니, 다행히 인원이 충족되었다니,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dol7009)

■ 서울본부 홈페이지에 남긴 시민들의 지지 댓글 중

- '서명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권봉열 씨)

- '꼭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 인권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기대합니다. 미래 주인공들이 살아갈 숨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김주혁 씨)

-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되길빌어요 파이팅!!!!' (강동균 씨)

- '소식 갑자기 듣고 찾아왔는데..서명해야겠네요! 진짜 찬성입니다!' (김현아 씨)

- '꼭!!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수경 씨)

- '서울 시민은 아니지만, 인권과는 거리가 먼 초중고교 생활을 보냈으며, 지금도 학생의 인권에 대해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인이자 청년으로써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의 시기는 지났지만 내 후배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인권이 꽃피는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힘내세요' (김일백 씨)

- '학생인권조례 제정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소연 씨)

- '학생인권조례 제정 꼭 이루어지길..희망' (김필옥 씨)

- '함께하는분들: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공동체 나다, (서울본부 소속단체 모두 언급한 뒤), 개인활동가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데 아직 5만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정말 맥 빠지는 일입니다. 어제 한겨레 보니까 기득권층의 무료급식반대 서명은 벌써 25만이나 되었답니다. 분발합시다.' (엄기정 씨)

- '자주 못 만나는 지인들이지만 전화번호목록에 있는 분들에게...문자메시지로 서명권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오랫만에 모처럼 전화로 인사도 나누게 되네요 ^^ 자~여러분들 전화번호 한 번 좌악~' (아이디: 알사탕)

- '인권은 학교에서부터 보호하고 가르켜야 받아야합니다.' (문윤기 씨)

- '학생인권조례 서명합니다.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세상' (임수진 씨)

- '주위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며 열심히 홍보하는 친구와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한사람의 서명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생활 1년남은 학생으로서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수 있도록 기원하며' (아이디: 어떤 학생)

- '서명해요!! 꼭 될꺼예요. 난 못했어도. 내 자식들은 꼭!' (김국경 씨)

- '인권은 누구나 어디에서든 누릴 수 있어야 해요' (한동균 씨)
-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경기도, 서울..이제 지방으로 퍼져나갈 차례인 것 같아요^^' (장서연 씨)

[기자회견문]

서울시민의 힘으로 꽃피운 학생인권의 봄을 이어가자!

- 8만 5천명의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명부 제출에 부처 -

오늘 우리는 선언한다. 찬란한 학생인권의 봄이 열렸음을! 서울시민 유권자의 1%라는 주민발의 성사 기준을 넘는 8만 5281명의 서울시민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에 동참했다. 비로소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현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왔음이,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학교로 변화할 수 있음이, 학생인권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이 증명되었다.

물론 학생인권의 봄을 열어내기 위한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수많은 암초들이 학생인권 보장과 민주교육이란 원대한 정박지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를 방해했다. 교과부의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해야하는 서명 절차, 당사자인 학생들의 서명참여 불가, 무엇보다 몇몇 언론과 보수단체들의 여론 호도가 그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발의 운동이 다소 흔들리고 좌초의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민발의 운동이 주저앉지 않고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열망하는 서울시민들의 참여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서명에 참여하고 연대해주신 서울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서명운동에 주어진 6개월의 기간 동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서울시민들이 서명참여는 물론, 후원과 홍보, 자원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의 지지를 보내주셨다. 또한 서울이 아닌 타 지역의 시민들 역시 서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주민발의 성사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시민들이 보내주신 지지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발판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슬러 다시 운동화 끈을 쪼여 매는 동력으로, 무엇보다 주민발의 운동과 그 성사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무엇보다 서울시민들은 서명참여를 통해 학생들 역시 '인간'이라는 사실, 학생 역

시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이제는 학교라는 교육의 공간이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되는 폭력의 공간이 아니라 우애와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소통과 존중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공교육의 현장에 자리 잡아 몸으로 익힐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에도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다는 당연한 진실을 환기시켰다.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는 학교현장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던 교사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 같이 큰 힘이 될 것이다.

한편, 주민발의 운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못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참여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에 청소년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인권을 다루는 데 있어 정작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또 어디 있겠는가? 비단 주민발의 문제만은 아니다. 선거권을 포함해 정치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청소년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문제는 물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젠 우리 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적 전제에도 맞지 않는 이 역설적인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제 공은 서울시의회로 넘어간다. 우리는 믿는다. 학생인권의 보장과 학교민주주의의 실현은 물론, 사회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더 확산되고 뿌리내리길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시의회가 잘 받들 것이라 믿는다. 또한 우리는 요구한다. 서울시민들의 서울시민의 뜻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의 기준으로 쓰인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 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길 요구한다.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의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의회 최선의 선택은 주민발의안의 원안통과 시키는 것이다.

이제 학생인권보장의 흐름은 더욱더 커져나갈 것이다. 이미 광주와 전북 등에서 조례제정이 가시화된 상태이며 경남과 충북에서는 서울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발의 운동을 선언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 보장의 바람이 전국으로 불고 있다. 바야흐로 학생인권의 시대이다. 물론 여전히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를 거스르려 하는 시도들도 있다. 하지만 인간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비로소 열려진 학생인권의 시대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이젠 느끼자. 마음껏 느껴보자. 우리 함께 서울시민들의 힘으로 꽃핀 학생인권의 봄을 마음껏 느껴보자. 너무나도 찬란한 학생인권의 봄의 시작이다.

2011년 5월 20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홍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